

# 수도권 M-버스 6월부터 7개 노선 추가 운행

송도 · 용인 · 파주 · 남양주 등 확대...  
4월까지 사업자 선정

문의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44-201-3829)

■ 하루 59,000여명이 이용하여 수도권 자가용 운행 감축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Bus)가 인천(송도), 용인(기흥), 파주(교하), 남양주(진접), 김포(한강) 등 7개 노선이 확대되어 운행된다.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광역급행버스(M-Bus)가 운행시간 단축, 고급차량 사용, 입석금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6월부터 7개 노선을 추가하여 기존 18개 노선을 총 25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광역급행버스(Metropolitan Bus) :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필요시 7.5Km 이내 6개 이내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논스톱(non-stop) 개념의 급행 시내버스. 지난 '09년 8월 도입·운영되고 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현황〉

권역	노선수	기존 노선(18개)	신규 확대 노선(7개)
동북부	3	남양주(화도)-잠실역	남양주(평내·호평)-잠실역 남양주(진접)-동대문
동남부	8	성남(분당)-시청 용인(수지)-시청 수원(영통)-서울역 화성(동탄)-서울역 삼성전자~서울역 삼성전자~강남역 화성(동탄)-강남역	용인(기흥)-서울역
서북부	7	파주(운정)-서울역 고양(중산)-여의도 고양(대화)-서울역 고양(식사)-서울역 고양(정발산)-강남역	파주(운정)-양재역 파주(교하)-여의도
서남부	7	김포(한강)-서울역 인천(송도)-강남역 인천(논현)-강남역 안산(단원)-여의도 인천(청라)-서울역	인천(송도)-신촌 김포(한강)-강남역 인천(송도)-신촌 김포(한강)-강남역

○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7개 노선은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예상수요, 교통여건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선정하였다.

■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는 공개모집(2.4일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을 통해 민간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버스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개선 능력 등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사업자 모집 신청접수는 2.15(금)부터 2.22(금)까지이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는 사업자 선정을 4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운송준비 기간을 거쳐 6월중에 확대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한편, 광역급행버스는 중간정차횟수를 최소화하여 운행시간을 10~20분 가량 단축시켰고 고급차량 사용 및 입석운행 금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광역급행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2.6월)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서비스에 만족을 표시하였고, 12%가 자가용에서 광역급행버스로 전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18개 노선의 1일 평균 이용객이 59,000여명으로 자가용 7,000여대의 운행 감축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

■ 이번 광역급행버스의 확대 운행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져 자가용 이용이 감소되는 등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요금 평균 4.0% 인상

동계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 인상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02-2110-4662)

■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1월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 수급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며,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것이 특징임

○ (주택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0% 인상

○ (산업용·일반용)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평균 이하 인상

○ (교육용, 농사용) 교육용, 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평균 이하 인상

### 〈 용도별 조정률 〉

구분	평균 주택	일반	산업	교육	가로	농사	심야
조정률(%)	4.0	2.0	4.6	4.4	3.5	5.0	3.0
			(저압:2.7, 고압:6.3)	(저압:3.5, 고압:4.4)			

■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금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함

\* 일반용(을)·산업용(을): 계약전력 300kW 이상

○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변경함(~ 14년까지)

■ 한편,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5.1일 부터 적용)

\* 스마트 계량기 보급상황에 따라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 '12.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 ( '11.8월~ '12.12월)를 1년간 연장(5.9% 할인)키로 하였으며,

○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 시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력 인정 교육 기관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약 110kWh/월)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음(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 감면 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

\* 형광등 5개, TV(30인치), 냉장고(600리터), 세탁기(10kg) 사용시 전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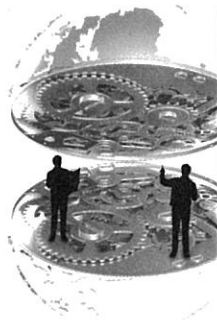
■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요구키로 함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요청

- 지식경제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요금조정: 60만kW 감축,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 약 15만kW 감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 또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4.66만원→4.75만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611만원→638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소비자 물가는 0.04%p, 생산자 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건설현장 방동제 중독사고 주의

겨울철 집중발생,  
안전보건공단 3대 예방수칙 등 제시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실(032-5100-721)

안전보건공단(백현기 이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방동제 음용사고가 동절기에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3대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방동제 음용사고는 지난 한해 동안 24명의 중독사고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1월과 11월, 12월 등 겨울철에 연이어 집중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과 11월에 재해발생 경고를 각각 발령하고, 건설현장에 경고표지 스티커 배포 등 재해예방 활동을 하였으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방동제 음용사고에 대한 3대 예방수칙은 ‘콘크리트 반죽용 물은 식수로 사용금지’, ‘방동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과, ‘식수 제공 장소 지정 및 마시는 물 표시’ 이다.

방동제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물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무취, 무향의 투명 액체이며, 물과 식별이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아 페트병 등에 담아 사용함으로써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9개 방동제 제조업체와 방동제에 색상을 추가해 제조하기로 한데 이어, 올해는 방동제에 쓴맛 등을 첨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건설현장 기술지원시 관련 재해예방자료를 제공하고 공사관련 협의체와 일선 건설현장에 근로자 안전교육시 방동제 음용사고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이 상실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각별한 관심과 재해예방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